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-35호

『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』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8월 28일

##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및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시설명칭 및 주소를 정비하고,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다.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바. 사용료의 납부면제·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사.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.
- 아.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.
- 자.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복지환경  
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02-789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(전화 042-270-5127,  
FAX 042-270-5039, E-mail : kimcs4612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은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26(대흥동)에 둔다.

**제3조(업무)**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
2.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
3. 소득보장
-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**제4조(시설)**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.

1. 사무실
2. 식당 및 조리실
3. 상담실
4. 집회실 또는 강당
5. 프로그램실
6.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
- 7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**제5조(개관시간 및 휴관일)** 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②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.

1. 토요일, 공휴일
2.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

③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휴관일에 개관 또는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사용허가)**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7조(사용제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
**제8조(사용료)** ①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이 제1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사용료의 면제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
2.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
3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10조(사용료 반환)**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**제11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**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)**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제13조(위탁운영)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 사용료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이용 구분	사 용 료		비 고
		평 일	토요일, 공휴일	
대강당	1회	100,000	120,000	
소강당	1회	80,000	100,000	
국악·무용실	1회	80,000	100,000	
강의실	1회	40,000	50,000	
야외공간	1회	80,000	100,000	

[별표 2]

## 사용료 반환기준(제10조 관련)

반 환 사 유	반 환 기 준
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전액환급
2.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
가.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	전액환급
나.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	전액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% 배상
다.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	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% 배상
3.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
가.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	전액환급
나.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	사용료 총액의 10% 공제후 환급
다.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	사용료 총액의 10%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

# 관 계 법 령

## ● 노인복지법

[시행 2012.2.5] [법률 제11013호, 2011.8.4, 타법개정]

**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**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노인의료복지시설
3. 노인여가복지시설
4.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노인보호전문기관

**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**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 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● 도로명주소법

[시행 2012.1.1] [법률 제10987호, 2011.8.4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도로명주소,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·관리·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·사용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이 법은 주소(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, 위치, 장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,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,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도로명 부여 등)**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기초조사
2. 도로구간의 설정·변경·폐지
3. 도로명의 부여·변경·폐지
4.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
5. 기초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
6.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
7.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2개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, 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
2.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
3.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·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,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·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·도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(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)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


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(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)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